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302 회 임시회
2021.9.6.(월)

주요 업무보고

2021. 9.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I. 일반 현황

조직 1국, 3과, 11팀



인력 43/54(정원/현원)

(’21.8월말 현재)

구분	합계	일반직	정무직	임기제	경찰관	관리운영직
계	43/54	38/36	2/2	0/0	3/16	0/0
자치경찰총괄과	22/25	18/18	2/2	0/0	2/5	0/0
자치경찰협력과	9/16	8/7	0/0	0/0	1/9	0/0
자치경찰지원과	12/13	12/11	0/0	0/0	0/2	0/0

- 정무직 정원 : 자치경찰위원장(정무직 1급), 사무국장(정무직 2급)
- 경찰관 정원파견 : 3명(총경1, 경정1, 경위1)
- 경찰관 현원파견(정원외) : 13명(경정3, 경감2, 경위2, 경사4, 경장2)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자치경찰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수립, 법령·제도개선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 ○ 자치경찰 시행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경찰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과의 업무협력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국가경찰사무 협력조정) 구성 및 운영 ○ 자치경찰사무 주민안전, 교통, 다중운집행사 지도감독
자치경찰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 시책의 수립 시행 ○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방안 검토 ○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사업예산 편성, 집행관리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자치경찰사무 경찰관 감찰요구

예 산 총 규모 : 1억 85백만원

○ 총괄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위원회 사무국	0	185	-

※ 자치경찰사무 이관 비용은 (약칭)경찰법 제34조에 따라 '국비부담원칙'임

○ 부서별 예산 : 총 1억 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합 계	0	185	-
자치경찰총괄과	0	163	-
자치경찰협력과	0	12	-
자치경찰지원과	0	10	-

※ 2021년의 경우 자치경찰사무 사업비 등 국가편성예산은 기존대로 국가(경찰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2022년부터 국가에서 지자체에게 사업비를 지원(국고 보조 100%)할 예정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현황

○ 위원장 : 김학배

- 상임위원 : 김성섭(사무국장 겸직)

- 비상임위원 : 권성연, 김성태, 이창한, 장전배, 좌세준

○ 임기 : 3년(연임 불가), '21.6.28~'24.6.27

○ 위원 프로필

사진	성명(연령)	성별	주요경력
	김학배 (63) 〈위원장〉	남	- (前)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前)울산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섭 (64) 〈사무국장〉	남	- (前)서울중부경찰서장 -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前)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성연 (53)	여	- (現)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 (現)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前)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김성태 (55)	남	- (現)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現)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前)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이창한 (51)	남	- (現)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現)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연구원 원장 - (前)동국대 미래융합대학 학장
	장전배 (59)	남	- (現)충포화약기술협회 이사장 - (前)전북·광주·제주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경비국장
	좌세준 (56)	남	- (現)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前)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 -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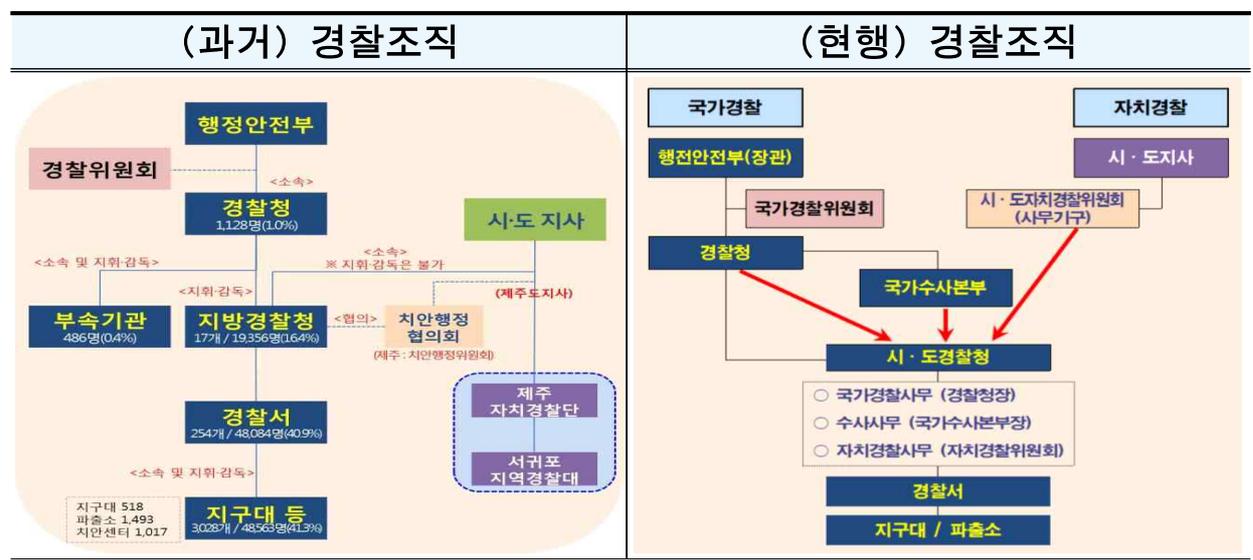
II. 자치경찰제 소개

일반적 의미의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은 국가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
-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제도

자치경찰제 개요

- 시행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2월 제정)
- 조 직 : 자치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 구 성 : 7인 (시장지명1, 위원추천위(2)·시의회(2)·교육감(1)·국가경찰위(1) 추천)
 - 주요역할 :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 사 무 국 : 위원회 소관업무 처리 (상임위원이 사무국장 겸직)
- 사 무 : 생활안전(순찰, 여성·청소년 등), 교통, 지역경비(다중운집행사)
- 인 사 : 경찰관은 국가직 유지, 시·도에 경찰관 임용권 일부 위임(경정 이하)



그 동안 추진경과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자치경찰제' 도입 천명('17.7월)

- '17.11월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발표
- '18.03월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위 구성
- '18.12월 : 자치경찰법제화 TF 구성·운영('18.12월~'19.1월)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시도지사협의회
- '19.02월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발표(당·정·청 협의회)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 통과

- '19.03월 :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발의(홍익표 의원)
- '19.06월 : 광역지자체 대상 자치경찰 설명회 개최(2회)
- '20.05월 : 제20대 국회 종료, 법안 자동폐기
- '20.08월 : 제21대 국회, 경찰법 개정안 발의(김영배 의원)
- '20.12월 : 제21대 국회, 경찰법 개정 수정안 통과 - 자치경찰제 도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 노력과 준비

- '19.03월 : 자치경찰 법안(홍익표 의원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제출
- '19.07월 : 「서울시-서울경찰청」 정례회의 추진(총 8회 개최)
- '20.02월 : 서울시 자치경찰 자문단(14명) 구성·운영
- '21.01월 : 자치경찰 준비 전담팀(2팀, 7명) 신설·운영
- '21.03월 :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 운영
- '21.05월 :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 '21.06.25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명식
- '21.07.02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 개최

자치경찰 사무

○ 근거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21.5.20 공포)

○ 자치경찰 사무

① 생활안전 분야

- 범죄예방, 지역 순찰, 주민 방범활동지원, 재난·재해시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교통활동 분야

- 교통법규 위반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 주민교통 활동지원,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등

③ 지역경비 -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 경찰사무 구분

	〈사무 구분〉	〈주요내용〉	〈지휘 주체〉
경찰 사무	자치경찰사무	-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사무 ※ 세부적인 자치경찰사무는 조례로 규정	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	- ‘형사소송법’ 상 수사 관련 사무 (자치경찰수사사무 포함,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안보수사 등)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사무	- ‘자치경찰사무’ 및 ‘수사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찰사무 (정보, 외사, 경비, 감사 등)	경찰청장

○ 서울시 주요 자치경찰사무 (조례 별표1)

자치경찰사무(법률)	구체적인 수행사무 및 범위(조례)	
생활 안전	1) 순찰 및 시설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범죄예방 순찰 등
	2)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지도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 지역협의체 협업·지원·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 구조지원	재난우려·안전사고·재해·재난발생 시 긴급구조 지원, 해당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아동·청소년·노인 등 학대예방, 성폭력 예방, 가정·학교폭력 대응,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지원, 학대예방인력 운영 등
	5) 사회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단, 지자체 사무 제외)	경범죄 위반 단속, 기초질서 확립 홍보, 풍속업·사행행위 단속, 성매매 단속·예방
	6) 그 밖의 지역주민 생활안전 관련 사무	생활안전 관련 112 신고처리, 지하철경찰대, 한강경찰대, 관광경찰대, 유실물·분실물 관리, 응급구호대상자 지원, 주취자응급센터 운영지원
교통 활동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법규 위반 단속·신고처리, 음주단속장비 관리
	2) 교통안전시설·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관리, 교통안전활동 홍보 등
	5)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안전기준 초과차량 허가처리, 도로공사·점용허가 조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관리 등
	6) 그 밖의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교통사고·법규위반사항 112 신고처리, 운전면허 발급·갱신 등 관련 민원업무,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정체 관리,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
지역 경비	다중운집행사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 및 안전활동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현황

○ 소속기관 :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31개소)

※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은 국가경찰 소관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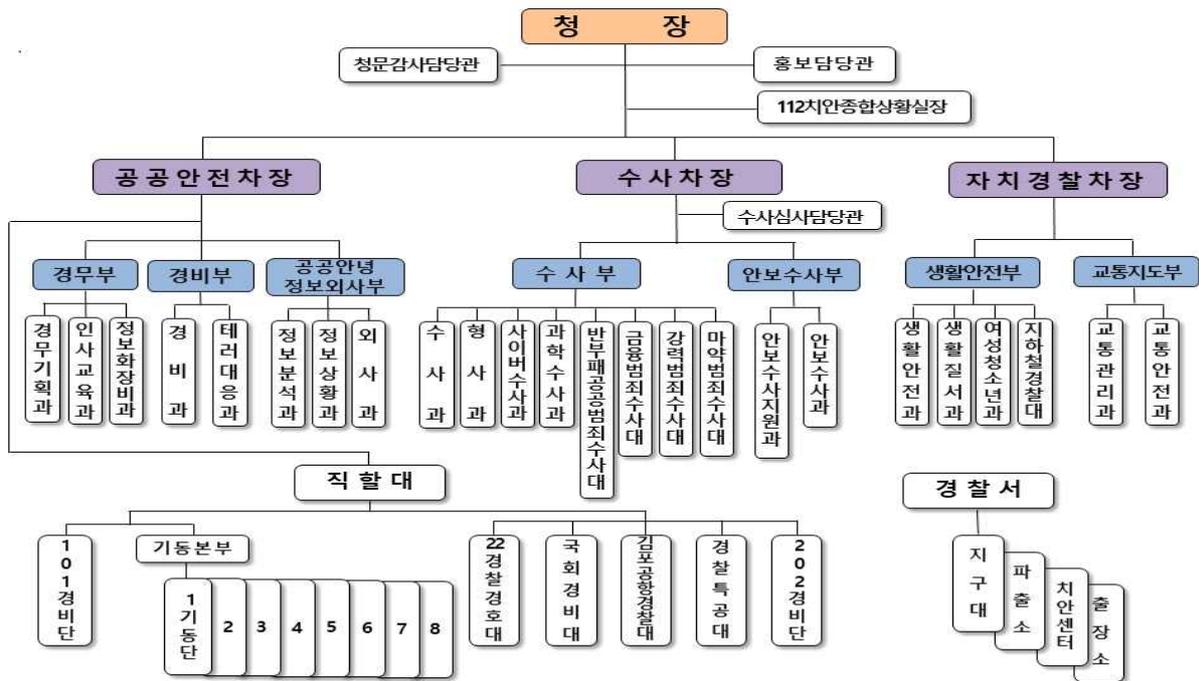
○ 담당 경찰관 : 3,730명(현원 기준)

구분(단위 : 명)	합계	계		서울청		경찰서	
		국가	자치	국가	자치	국가	자치
합계	4,352	622	3,730	290	408	332	3,322
사무국 파견	15	-	15	-	15	-	-
생활안전	401	29	372	2	114	27	258
생활질서	265	67	198	5	52	62	146
여성청소년	1,308	84	1,224	53	47	31	1,177
지하철경찰대	179	91	88	91	88	-	-
교통관리	248	114	134	15	22	99	112
교통안전	1,936	237	1,699	124	70	113	1,629

※ 서울경찰청 조직 현황

- 본 청 : 3차장, 7부, 3담당관, 1상황실, 24과(93계)

- 소 속 : 31개 경찰서(지구대 98, 파출소 144, 치안센터 166, 출장소5), 8직할대



Ⅲ. 정 책 목 표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자치경찰 확립

서울자치경찰 정착 및 치안역량 강화 기반조성

서울자치경찰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 ▣ 경찰관 임용권한 행사
- ▣ 예산편성·집행체계 정립
- ▣ 교육 및 후생지원 검토
- ▣ 자치경찰사무 감사 추진

치안개선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및
협력사업 관리

- ▣ 지휘·감독규정 마련
- ▣ 현안 자치경찰사무 대응
- ▣ '중점협력사업' 추진
- ▣ 코로나19 대응 강화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 및
홍보 추진

- ▣ 시민·유관단체 참여강화
- ▣ 시민과 함께하는 안원 자치경찰
- ▣ 서울형 자치경찰제 홍보

IV.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업무보고

1. 서울자치경찰 조기정착 제도기반 마련

- ①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확립
- ②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임용권한 행사
- ③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 정립
- ④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 지원
- ⑤ 자치경찰사무 감사규칙 마련 및 합동·자체감사 실시

2. 치안개선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및 협력사업 관리

- 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서울경찰청장 지휘·감독규정 제정
- ② 현안 자치경찰사무 대응을 위한 적극적 지휘·관리
- ③ '중점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대시민 치안서비스 향상
- ④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활동 강화

3.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및 홍보 추진

- ① 시민·유관단체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 정착
- ②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자치경찰 시책 수립·시행
- ③ 서울형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1. 서울자치경찰 조기정착 제도기반 마련

①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확립

②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임용권한 행사

③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 정립

④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 지원

⑤ 자치경찰사무 감사규칙 마련 및 합동·자체감사 실시

1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확립

서울시 자치경찰사무를 총괄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및 규정 마련 등 활동 기반 확립

□ 추진방향

- 자치경찰 운영 목표 및 비전 확립을 통해 체계적 위원회 운영 및 성과창출
- 효과적인 위원회 의사운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등 제반규정 마련

□ 위원회 주요 운영실적(6.28~8.20)

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 개최횟수 : 총 9회(개최빈도 : 6일당 1회 개최)
- 상정·처리 안건 : 총 34건(심의안건 24건, 보고안건 10건)
- 주요 심의안건 : 자치경찰사무 보고·심의·의결, 경찰공무원 인사 의결 등
 - (사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보고 및 추진과제 의결, 코로나19 협조 의결 등
 - (인사) 서울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전보·휴직 의결 등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울경찰청과 협력 적극 추진

- 한강공원 등 음주금지 행정명령 관련 합동단속 추진('21.7.9~)
 - 서울경찰청에 합동단속 협조요청(7.7, 委-警) 및 합동단속 인력지원 등 지원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위반 업소 합동단속 추진('21.8.9~8.27)
 - 합동단속 관련 위원회 의결 및 서울청장 지휘(8.6), 단속현장 인력지원·상황관리

3 서울시-서울경찰청간 '중점 협력사업' 추진

- 한강공원 안전강화, 1인가구 주거안전 지원, 아동학대 예방, 지하철 범죄예방,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등 5개 사업을 양 기관이 밀착 연계하여 추진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 : 전재명 ☎2133-9804 자치경찰총괄팀장 : 정명이 ☎9805 담당 : 오병현 ☎9807
자치경찰위원회팀장 : 이동주 ☎9816 담당 : 정진우 ☎9817

□ 세부 운영방안

- **(목표·비전)** ‘서울 자치경찰’ 목표수립·평가를 통한 비전제시 및 성과창출
 - － (목표) 시민·전문가·유관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서울 자치경찰’ 목표 수립
 - － (평가) 연간 목표달성 평가·환류를 통한 제도정착 도모 및 개선사항 발굴
 - ※ 위원회 소관사무로 ‘자치경찰사무 목표수립·평가’ 규정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호)

- **(종합계획)** 체계적 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수립방향) 위원회 운영사항 및 소관업무 전체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계획 수립
 - － (주요내용) 위원회 연간일정, 자치경찰사무 지휘·관리방안, 거버넌스 구성방안 등

- **(자문·연구)** 위원회·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위원·전문가 등 자문·연구 추진
 - － (자문) 전문 연구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방안 마련(‘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소’ 등)
 - － (연구용역) 서울 자치경찰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검토

- **(규정마련)** 자치경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사무규정 등 마련
 - － (규칙제정) 자치경찰 지휘·감독 규정,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등 사무수행 규칙제정
 - － (폐지규칙제정) 경찰청 소관규칙 중 폐지된 사항에 대한 규칙 제정 추진
 - ※ 폐지규칙 :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등

□ 추진일정

- ‘서울 자치경찰’ 목표 등 관련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 ’21.9월중
-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종합계획(안) 확정·의결 : ’21.9월말
- 위원회 운영 및 소관사무 관련 규정 제정 : ’21.10월限

2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임용권한 행사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상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입 받은 임용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 확립

□ 경찰임용권 수입현황

- 서울시장 :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
 - 단,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 경정 이하 일부 임용권
 -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수입 임용권 적용범위〉

- ▶ 적용기관 :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일선 지구대, 파출소 제외)
- ▶ 담당업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 자치경찰사무(업무비율 51% 이상)
- ▶ 담당인력 : 3,730명('21.6월 현원 기준)

□ 임용권 재위임 현황

- (위임사유) **위원회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 준비**를 위해 한시적 재위임(서울청 요청)
 - 위원들의 임용체제 이해, 인사규정 정비, 실무진 인력완비·경험습득 등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하여 경미하거나 재량 여지가 없는 임용권 한시적 재위임(7.17~9.30)
- (위임범위) <경정 이하> 휴직·복직·직위해제, <경감 이하>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위 이하> 전보

구분	전보	파견	휴직·복직·직위해제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승진	승진채용·면직
경정	위원회	위원회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경찰청장	대통령	대통령
경감	위원회	위원회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서울시장	경찰청장
경위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위원회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서울시장	경찰청장
경사 이하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위원회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서울경찰청장 (재위임)	위원회	경찰청장

□ 추진일정

-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규정 마련 및 심의·의결 : '21.9월중
 - 서울경찰청으로 일부 위임한 임용권한을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방안 마련

3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 정립

서울시와 서울경찰청간 자치경찰사무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국가기관으로 예산 전출·배정 등 근거 부재
-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회계관리시스템’이 상이하여 예산집행에 어려움 존재
 - 지자체(e호조시스템)와 국가기관(디브레인) 시스템 간 연동 불가

□ 추진계획

- 서울시에서 국가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예산을 교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추진
 - 예산편성 지침을 정비하여 시→서울경찰청→경찰서로 예산재배정 근거 마련
 - 경찰공무원에게 회계권한 부여 등 예산의 적법집행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추진

※ 서울경찰청으로 예산재배정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및 반영('21.7.20)

- ▶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상 예산재배정 기관에 시도경찰청(서) 포함
- ▶ 단, 시도경찰청→경찰서 예산재배정 근거가 없어 개정 추가건의(지방재정법 시행령)

- 경찰공무원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 사용을 위한 제도정비
 -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계시스템 사용을 위한 경찰개인정보 공유추진
 - 자치경찰사무 예산담당 경찰공무원 ‘e호조’ 시스템 사용을 위한 교육 추진

□ 추진일정

- 경찰공무원 e호조 교육계획 수립·시행 : '21.9월
 - 경찰공무원 개인정보 공유 협의추진

4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 지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민과 접점에 있는 일선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및 교육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찰법 제35조(예산), 자치경찰 사무조례 제18조(자치경찰 공무원 지원)
- 추진방향
 - 자치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市-서울경찰청 간 보편적 후생복지 격차 해소
 - ▶ 타 시·도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 추진
 - 자치경찰사무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교육운영 체계 정립

□ 추진계획

-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 차액 지급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추진
 -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복지포인트 격차 지원 (市 1,500P, 서울경찰청 400P ⇒ 1,100P차)
 - ▶ 대 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3,868명 (경찰관 3,730명, 일반·공무직 138명)
 - ※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가능여부 검토 중(법령질의 등)
 - 자치경찰 공무원 근무현황 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방안 검토
 - ▶ 서울경찰청에서 근무공간 개선, 피복비 등 물품지원 요청
- 자치경찰 교육 콘텐츠 제작 구성 사전준비 및 교육운영 방안 마련
 - 교육 콘텐츠 제작 준비 :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
 - ▶ 자치경찰 교육 관련 서울시-서울경찰청 협력 체계 구축
 - e-러닝 교육과정 : 市 인재개발원,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에 교육과정 편성 준비

□ 추진일정

- 맞춤형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검토 : '21.9. ~12월
- 자치경찰 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 '21.9. ~12월

작성 자

자치경찰지원과 : 우정숙 ☎2133-9854 교육후생팀장 : 김훈기 ☎9855 담당 : 구혜림 ☎9857
김철묵 ☎9858

5 자치경찰사무 감사규칙 마련 및 합동·자체감사 실시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찰·징계요구 등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바람직한 서울 자치경찰상 확립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찰법 제24조(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추진방향
 - 경찰청·서울경찰청과 중복감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감사 시행
 - 감사결과에 따라 우수사례 포상 및 비위·문제사실 적발시 감찰·징계요구 등 추진
 - ※ 감사대상(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 감사업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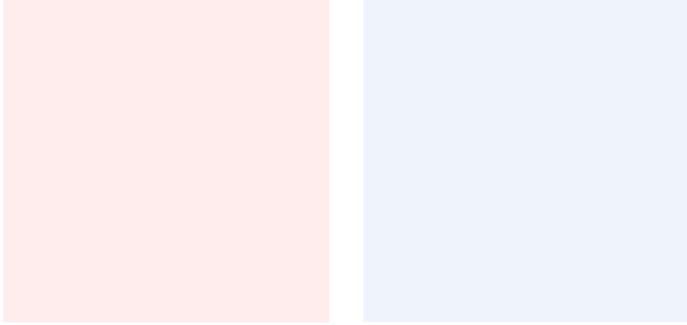
-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 제정
 - (근거) 조례 제20조 “자치경찰사무 감사절차와 방법 등을 위원회 세칙으로 정함”
 - (내용)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의 절차 및 방법 △경찰청·서울청과 상호협조 및 감사의뢰 △감찰·징계요구 대상 및 방법 등
- 서울경찰청 **합동감사** 또는 위원회 **자체감사** 추진
 - (원칙) 중복감사 방지, 서울청과 합동감사 실시, 주요시책 자체감사 추진 등
 - (내용) 매년 10개 경찰서(서울 內 31개서) 대상 합동감사, 자체감사는 필요시
 - ※ 감사결과 감사대상 주요비위 확인시 징계요구, 필요시 서울청에 감찰 요구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규칙」 제정 : '21.9월
- '21년 하반기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21.9~12월

작성 자

자치경찰지원과 : 우정숙 ☎2133-9854 인권감사팀장 : 김철언 ☎9871 담당 : 김병기 ☎9872



2. 치안개선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및 협력사업 관리

- 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서울경찰청장 지휘·감독규정 제정
- ② 현안 자치경찰사무 대응을 위한 적극적 지휘·관리
- ③ ‘중점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대시민 치안서비스 향상
- ④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활동 강화

1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서울경찰청장 지휘·감독규정 제정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범위와 방법 등을 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여 빈틈없는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추진방향

- 사무처리 원칙 및 절차 범위 등을 위원회 규칙으로 의결·제정하여 객관성·규범성 확보
- 경미하거나 위원회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처리방안 등을 규정하여 치안공백 방지

〈관련근거〉

- ▶ 경찰법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④ ~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 대통령령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의 위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절차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 제정 주요내용

- (기본원칙) 서울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처리
- (재량처리) 세부적인 집행사무, 민원, 통상적 사무는 서울청장이 재량으로 처리
 - 단, 중요정책 변경, 예산반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
- (긴급사항) 즉각적 조치사항에 대해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서울청장 재량 처리
 - '즉각적 조치' : 국민 생명·재산보호 및 공공안녕·질서유지를 위해 즉시조치가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 서울경찰청장이 재량으로 처리한 즉각적 조치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 의무 부여

□ 추진일정

- 위임범위 등 제정내용 구체화 후 서울경찰청 협의·의견수렴 : '21.9월
- 최종안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서울경찰청 통보 : '21.9월

2

현안 자치경찰사무 대응을 위한 적극적 지휘·관리

「스토킹처벌법」(10.21 시행예정)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 치안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주요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휘·감독 추진

□ 추진방향

- 서울경찰청 소관 자치경찰사무 중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항 적극대응
 - 「스토킹처벌법」 4.20. 제정 및 10.21. 시행예정에 따라 피해자 안전도모
 - 지하철 범죄 및 교통사망사고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

□ 추진계획

- (스토킹범죄) 스톱킹 피해회복·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스톱킹처벌법 시행 전 ‘여성안전 상담관’ 시범운영 중(6.7~ 송파서 등 5개서)
 - 스톱킹 피해자 상담, 보호시설 연계, 수사의회 전 과정 경찰 연계방안 검토
- (지하철범죄) 지하철 범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 지하철경찰대,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등 상호 분리된 지하철 치안기능 협력
 - 치안현안 공유 및 지하철 범죄발생률 감소 등 공동목표 수립, 합동순찰 등 추진
 - ※ 유관기관(자치경찰위, 도시철도과, 지하철경찰대, 교통공사, 국토부 철도특사경) 간 회의 및 현장방문 추진('21.7.~8.)
-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 교통사망사고 감소세 둔화(1분기 전년대비 -25%, 2분기 -10%) 및 서울은 증가세로 적극대응 필요
 - 무단횡단 등 단속 지휘 및 ‘이륜차·PM’사고 줄이기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 등 추진
 - ▶ 배달업체(쿠팡이츠 등)와의 협약,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관간 협업(도시교통실, 교통안전공단, 서울청 등)

□ 추진일정

- ‘여성안전 상담관’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21.9월~
- 지하철 범죄예방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 '21.9월~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업무협약체결 및 TF구성 추진 : '21.9월~

작성 자

자치경찰협력과 : 연명흠 ☎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김지혜 ☎9837 담당 : 김학준 ☎9838
생활안전팀장 : 김정수 ☎9847 담당 : 조광재 ☎9848, 성진경 ☎9849
교통경비팀장 : 신은정 ☎9842 담당 : 이주철 ☎9843

3 '중점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대시민 치안서비스 향상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를 통한 대시민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서울 경찰청과 효과적인 협력사업 운영체계 마련 및 중요 협력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실·국, 경찰의견 수렴을 통해 치안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서울시-서울경찰청간 상호 역할분담으로 협업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시민안전과 직결되고 개선효과가 뚜렷한 주요 협력사업을 '중점협력사업'으로 구성·추진
 - 자치경찰제 도입 전부터 시민안전 현안사항 위주로 협력사업 적극 추진 중

연번	과 제 명	주요내용	연계부서(시⇔경)
1	한강공원 안전 강화	▶ 한강공원 탄력순찰 강화 ▶ (가칭)'한강공원순찰대' 중장기 신설	한강사업본부 ⇔ 소관 경찰서 등
2	1인가구 주거안전사업 협력	▶ '안심마을보안관' 등 지역 순찰 강화 지원(노하우 전수, 지역경찰 연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 ⇔ 생활안전과
3	아동학대 예방 및 공동대응	▶ 아동학대 신고-현장확인-사후조치 전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력 확대	가족담당관 ⇔ 여성청소년과
4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	▶ 불법촬영 등 지하철 범죄근절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및 추진방안 논의	도시교통실, 교통공사 ⇔ 생활안전과
5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횡단 보도 등 집중순찰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도시교통실 ⇔ 교통지도부

- 이외에도 시민 입장에서 중점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 '중점협력사업' 선정 및 수행
 - ※ '21.2월 이후 서울경찰청과 협력 필요과제 의견수렴 및 20여 건 발굴(실국 및 경찰과 협의 중)

○ 서울시 - 서울경찰청 간 역할분담 및 협약체결 추진

- 각 사업별 협력추진사항 정리·역할분담 및 필요시 기관간 협약(MOU) 체결추진

□ 추진일정

- 서울시-서울경찰청간 '중점협력사업' 선정 및 위원회 의결·확정 : '21.10월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 : 전재명 ☎2133-9804	자치경찰총괄팀장 : 정명이 ☎9805	담당 : 오병현 ☎9807
	자치경찰협력과 : 연명흠 ☎2133-9831	경찰협력팀장 : 최상수 ☎9832	담당 : 송미현 ☎9833 김낙현 ☎9834

4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활동 강화

다수 시민 방문 공원 및 집합금지 고시 위반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지역에 대한 서울시-경찰간 합동단속으로 시민 안전 확보

□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합동단속 등 적극대응
 -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시민불안 해소 및 야외 감염노출 축소 필요
 - 위원회 차원의 시-경찰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확산 효과적 저지

□ 주요내용

- **(한강공원단속)** 심야 음주우려 한강공원 등 경찰 순찰인력 지원 및 현장점검
 - 심야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서울경찰청과의 합동단속 협조요청(7.7, 委→警)
 - 6개 주요 한강공원(잠실·뚝섬·잠원·반포·여의도·망원) 등 심야 음주사항 계도·합동단속
 - 일 100여명 경찰인력 지원, 실질적인 단속·계도효과 확보 및 사업부서 부담 경감
 - ※ '21.7.9~8.20일간 경찰인력 누적 총 3,521명 지원, 계도 16,787건, 과태료 166건 단속
- **(유흥주점단속)**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등 합동단속으로 감염확산 방지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고시 위반업소 합동단속 관련 위원회 의결(8.6)
 - 위원회 및 식품정책과,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 유흥시설 등 합동단속
 - 유흥시설 유형별 소관부서 상시단속 및 첩보 입수 시 기관간 연계 합동단속 실시
 - ※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중인 업소 현장단속(8.10 / 8.17), 4개 업소 220명 적발

□ 향후계획

-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시까지 지속 지원 및 현장단속



< 한강공원 단속(현장의견 청취, 현장 합동단속) >



< 유흥주점 단속 >



3.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및 홍보 추진

① 시민·유관단체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 정착

②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자치경찰 시책 수립·시행

③ 서울형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1 시민·유관단체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 정착

시민과 치안 유관단체의 자치경찰제 참여를 확대하여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지역 치안수준 증진 및 시민이 희망하는 '서울 자치경찰' 정착

□ 추진방향

- 지역치안의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 추진
- 순찰·교통 등 유관단체와 밀착협력, 대시민 치안서비스 증진

□ 추진계획

- **시민의견 적극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홈페이지) 마련
 - 시민의견·제안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간 마련, 정책수립·시행사항에 반영
 - ※ 홈페이지 주소 : <https://news.seoul.go.kr/safe/autonomous-police/autonomous-police-fix>
- **'자율방범대' 관련업무 인수 및 지원을 통한 효율적 협력 추진**(행정국→위원회)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업무 위원회로 이관('21년말)
 - '자율방범대'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예산반영·지원을 통해 지역치안환경 개선
 - ※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위원회 간담회 개최, 주민참여치안 및 상호협력체제 강화방안 논의('21.7.21)
-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 유관단체 소통·협력 강화**
 - 시민 참여 교통 유관단체와 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강화를 통한 교통협력사업 추진
 - ※ 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연합회-위원회-서울경찰청간 간담회 개최, 협력방안 논의('21.7.28)

□ 추진일정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관련내용 市 홈페이지 반영 및 운영 : '21.9월~
-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정례 간담회 개최 : '21.9월~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 : 전재명 ☎2133-9804 민원홍보팀장 : 김인숙 ☎9805 담당 : 손욱순 ☎9827 최소영 ☎9828
자치경찰협력과 : 연명흠 ☎2133-9831 교통경비팀장 : 신은정 ☎9832 담당 : 이주철 ☎9843

2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자치경찰 시책 수립·시행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인권 기반의 친절한 「서울 자치경찰상」 구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찰법 제24조(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추진방향
 - 시민 참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권 시책 마련
 - 우수 자치경찰 선정·포상, 인권교육 등으로 인권 자치경찰 운영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인권시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해 **온라인 참여 공간 마련**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활용한 시민 소통 창구 운영
 - ※ 시민정책제안·칭찬합니다(우수사례 추천)·고쳐주세요(인권침해·비리제보) 게시판 활용
- **인권보호 등 우수 자치경찰 공무원 발굴 및 포상**을 통해 인권의식 제고
 - 매월 우수사례 취합하여 우수 자치경찰 선정 및 포상 수여
- **자치경찰 맞춤형 인권 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
 - 인권 교육 콘텐츠 및 인권 시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 ※ 인권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은 '22년 실시 예정
 - 관련 기관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성

□ 추진일정

-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내 게시판 운영 : '21. 9월
- 인권보호 등 우수 자치경찰 선정 및 포상 실시 : '21. 9월~12월
- 인권 자치경찰 시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 '21. 10월

작성 자

자치경찰지원과 : 우정숙 ☎2133-9854 인권감사팀장 : 김철언 ☎9871 담당 : 배재경 ☎9867

3 서울형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서울시 치안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이미지를 홍보하여 서울형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산에 기여

□ 추진방향

- 자치경찰 수행사무·주요시책에 대한 시민·경찰관의 인지도 제고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매체에 기반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 추진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역할 : 제도 안내, 시민과 직접소통 창구 마련,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참여 활성화
 - 구성 : 자치경찰제 소개, 서울시 자치경찰 활동 게재, 시민제안 코너 등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자치경찰제 홍보 실시**
 - 서울시-서울경찰청 운영 중인 소통플랫폼(서울시 18개, 서울경찰청 6개) 활용 홍보
 -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와 전광판 영상 표출 등(7.1~8.23)
 - ▶ 언론·온라인 기사 979회, 포스터·리플릿 배포 18,114건, 전광판 영상표출 262건
 - ▶ 내 손안의 서울, 소통방통, 트위터 등 뉴미디어 39,720회, 방송매체 4건 등
- **언론매체를 활용한 자치경찰제 홍보 실시**
 - 보도자료, 기고, 칼럼, 전문가 인터뷰 등 지속 추진('21.6월이후 6회 인터뷰)
-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치안 활동하는 일선 현장 방문·홍보 추진**
 - 마스크 목걸이, 홍보엽서 2종 등 제작 홍보물 현장 배포 및 홍보 실시

□ 추진일정

- 시민·경찰관 대상 현장 홍보 실시(마스크 목걸이 등 배포) : '21.9.~ 12.
- 온·오프라인,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지속 시행